쌀값 폭락에 벼농사 수익성 역대 최악

통계청 지난해 논벼 생산비 조사 … 소득률 50.2% 최저

단가 하락이 원인 … 순수익률 21% 1980년후 가장 낮아

쌀값이 계속 하락하면서 벼농사 수익성이 역대 최악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쌀농업 비중이 높은 전남·북 지역 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쌀 생산량은 늘지만 갈수록 쌀소비가 줄어 재고량이 쌓이는 바람에 쌀값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렇다보니 쌀값 보전을 위해 농가에 지급하는 변동직불금 규모가 커지고 그만큼 재정을 압박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16년산 논벼(쌀) 생산비 조사 결과'를 보면 작년 10a(1000㎡)당 쌀 생산비는 67만4340원으로 전년보다 1만7529원(2.5%) 감소했다.

쌀 생산비는 2014년부터 3년째 하락하고 있다. 작년 10a당 생산비는 2011년(62만8255원)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당 쌀 생산비는 2만4025원으로 전년보다 641원(2.6%) 줄었다. 20㎏당 쌀 생산비는 2012년 2만9189원을 정점으로 4년 연속 감소했다.

10a당 경영비도 42만6619원으로 전년보다 6317원(1.5%) 내려갔다. 벼농사를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감소하고 있지만, 총수입은 이보다 더 큰 폭으로 줄어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최악 수준을 기록했다.

10a당 총수입은 85만5165원으로 전년보다 13.9% 감소했다. 감소율은 2005년(14.6%) 이후 가장 높다. 10a당 순수익(총수입-생산비)은 18만1825원이었고, 소득(총수입-경영비)은 42만9546원이었다. 순수익을 총수입으로 나눈 순수익률은 작년 21.2%였다. 1980년 18% 이후 36년 만에 가장 낮다.

소득을 총수입으로 나눈 소득률은 50.2%로 1966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낮았다. 이처럼 수익성이 감소한 가장 큰 원인은 쌀 판매단가 하락 탓이다. 20㎏ 산지 쌀값은 2013년 4만3800원에서 계속 하락해 작년 3만4900원으로 뚝 떨어졌다.

통계청 김진 농어업동향과장은 "쌀 생산량이 많다 보니 재고가 쌓여 쌀값이 낮아진 영향이 크다"며 "그만큼 농가에 주는 보조금인 변동직불금 규모가 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윤현석기자 chadol@·연합뉴스

전일빌딩 5·18 총탄흔적 조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29일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외벽에서 탄흔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30일까지 건물 전·후면 외벽의 탄흔 조사를 한 후 탄환이 온전한 상태로 발견되면 현장에서 총기 종류 등을 분석하고 파편으로 발견될 경우 국과수 본원으로 보내 정밀 감식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2018년 전라도 정도 천년' 랜드마크 만든다

광주시·전남·전북도, 7개 분야 30개 기념사업 확정

호남권정책협 TF 운영 … 천년사 편찬·가로수길 조성

광주시, 전남도, 전북도 등 호남권 3개 시·도가 오는 2018년 전라도 정도 천년을 앞두고 천년사 편찬, 천년 랜드마크와 천년 가로수길 조성 등 7개 분야 30개 기념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는 29일 나주에서 열린 2017년 상반기 호남권정책협의회에서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을 확정했다.

2018년은 고려 현종 9년(1018년) 전주 중심의 강남도와 나주 중심의 해양도를 합쳐 전라도(全羅道)로 명명한지 천년이 되는 해다. '고려사'에 따르면 전주와 나주의 앞글자를 합해 명명됐다. 전라도는 이후 천년 동안 동북아 경제와 문화의 국제교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동학농민혁명, 의병항쟁 등 민중혁명이 일어난 한국 정신의 본향이었으나, 현대에 이르러 산업화에 소외되면서 위상이 위축됐다.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은 문화유산과 호남정신이 외면당하는 현실에서 지난 반세기의 낙후를 극복, 자랑스런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구상됐다. 또 천년 역사를 재정립하고 화합과 상생의 계기를 마련, 전라도의 새 미래를 열겠다는 취지다.

또 전라도의 좋은 이미지를 확산하기 위해 천년사를 편찬하고 슬로건과 엠블럼을 제작하며, 대국민 캠페인 홍보를 펼친다. 2018년 '전라도 방문의 해'를 맞아 한(韓)마당 페스티벌, 광역투어버스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할 예정이다.

광주는 새해 첫날 천년 맞이 타종식, 전남은 3월 천년 가로수길 조성 기념식, 전북은 10월 18일 천년 기념식 등 시·도별 전라도 천년 대표 기념행사도 개최한다.

시·도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하고, 전라도의 미래비전을 기획하는 학술행사도 개최한다. 천년의 역사와 문화, 새 미래를 상징할 랜드마크로 광주 '천년의 빛 미디어 창의파크', 전북 '전라도 새천년 공원', 전남 '전라도 천년 정원'이 들어선다.

광주 희경루, 전주 전라감영, 나주목 관아 등 천년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복원해 역사적 가치도 높이기로 했다. 전남은 서남해안선을 잇는 천년 가로수길을, 광주와 전북은 무등산과 지덕권에 생태문화 기반과 치유숲을 조성, 후손에게 유산으로 남길 계획이다.

이들 시·도는 기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호남권정책협의회 산하에 기념사업 총괄 T/F와 실행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에서 이 지사 등은 그 외도 호남권 관광벨트 구축, 전라선 고속철도 추가 증편, 세계호남인의 날 개최, 서해안철도와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 중앙정부 건의 및 국가계획 반영 등도 합의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확정한 30개의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은 실현가능성을 꼼꼼히 검토해 선정한 것으로 예산 확보 등 제반 절차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시의회 입법정책관 재신임 도입 취소

신임 정책관 다음주 임명

재신임 도입 추진으로 임용규정 무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광주시의회 신임 입법정책관 임명이 2년 임기를 보장한 본래 규정대로 이뤄진다.

2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입법정책관 공모에서 합격자로 뽑힌 조모씨를 다음 주중 신임 입법정책관에 임명하기로 했다. 임용 1년 뒤 재신임 절차 시행 등 거론됐던 임용 규정 변경은 하지 않기로 했다.

조씨는 지난달 입법정책관 공모에서 최종 합격자로 발표됐고 신원조회까지 마쳤다.

하지만 일부 시의원이 조씨 선정 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임용절차를 중단시켰다.

조씨 선정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고, 인물도 적절하지 않다며 임용 마지막 절차인 임명장 수여를 지금까지 미뤄왔다.

이 과정에서 시의원 간 갈등이 빚어져 시 산하 기관 청문회 보이콧 선언까지 나오는 등 의회 일정이 차질을 빚기도 했으며 임용규정에도 없는 재신임 제도 도입까지 거론돼 비난을 샀다.

그러나 재신임 제도 도입은 임용 1년 후 재계약 여부를 묻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임기 단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결국 시의회 안팎에서 공무원 임용규정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난 여론이 일자 시의회는 재신임 도입 등을 취소하고 본래 규정인 2년 임기로 조씨를 신임 입법정책관에 임명하기로 했다.

신임 입법정책관 임명장 수여는 강신기 시의회 사무처장이 출장에서 복귀하는 다음 주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가 뒤늦게 입법정책관을 규정대로 임명하기로 했지만 그동안 입법정책관 임명 과정에서 빚어진 파행에 대한 비난을 시의회가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고려인 자유로운 체류·취업 허용 추진

김동철 의원 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고려인 동포들이 국내 체류와 취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특별법 지원 대상을 거주국 고려인 동포에서 국내 체류 고려인 동포로 확대하고 ▲고려인 동포의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해 교육·취업·주거·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고려인 동포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국내 체류 고려인들의 최대 숙원인 국내 체류와 취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현재 구소련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 동포는 약 48만명이며 국내에는 약 2만7000명이 체류 중이다. 국내에 취업하기 위해 방문취업비자를 받은 고려인 동포는 연령(25세 이상)과 체류기간(최장 4년10개월) 등의 제한을 받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착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자서전 전량 폐기하고 국민앞에 사죄하라"

이형석, 이순자 자서전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최고위원은 29일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씨의 '우리도 5·18 피해자' 주장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80년 5·18의 진실규명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제87차 최고위원회에서 "80년 5월 광주를 피로 얼룩지게 한 12·12사태의 주범이자 내란목적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두환을 미화하는 자서전이 출간됐다"면서 "전두환과 그 추종세력은 인륜마저 저버린 자서전을 전량 폐기하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5·18 민주화운동은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 민주주의 혁명이지만, 완벽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지금까지도 갖은 폄훼와 왜곡을 당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민주화운동을 계승한 정당으로서 미완에 그친 5·18 민주화운동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발포명령자와 헬기기총소사 책임자 등을 역사의 심판대 위에 세울 것이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